"日 원전사고 巫 정보공유 합의 깼다"

방사선방어학회 토론회 "안정화요오드 비축량 늘려야"

일본이 자국 내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우리나라 등 아시아 각국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존 합의를 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제대 의대 김종순 핵의학과 교수는 6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국내 방사선 영향'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일본은 2005년 2월 한·중·일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방사선비상진료(REMP) 합의회의에서 방사선 사고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합의내용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MP 합의회의는 세계보건기구(WHO) 내 국제방사선비상진료체계(REMPAN)에 가입한 각국 전문기관이 모여 방사선 사고시 방사선사고 데이터 교류, 과학 및 기술 자료 교환, 정보통신을 이용한 실시간 공유, 과학회의 개최 등을 통해 사고 정보를 교환키로 합의한 자리이다.

김 교수는 "정부는 합의를 거론하며 왜 전문가 파견을 요청하지 않느냐고 요구해야 한다"며 "원전 사고가 일본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정부도 (이번 사고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규모 방사선 노출시 안정화요오드(KI)를 때에 따라 1명당 10~13정 복용해야 하는데 현재 비축량 132만정으로는 10만~13만명분밖에 안되는 것"이라며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군 지역주민만 1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비축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KI 가격이 싸고 특허가 만료된 만큼 비축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비축량을 늘리는 데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평상시 식품 내 방사선 검출기준과 비상시 기준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기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기조발언에서 "평상시 우리나라 식품기준은 세슘-137과 세슘-134 총량이 1㎏당 370㏃(베크렐)인 반면 먹는 샘물은 세슘-137 기준이 0.004㏃"라며 "비상시 기준과 비교해 일관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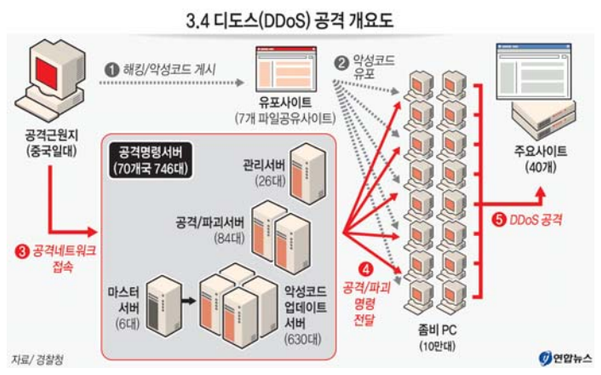
방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상시 식품 방사선 기준이 세슘의 경우 물·우유가 1㎏당 200㏃로 채소·과일 1천㏃ 및 곡·육·어류 2천㏃의 5~10분의 1 수준인데, 평상시 식품 내 방사선 기준을 보면 물의 기준이 일반식품 기준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이 7일 한반도에 상륙한다는 인터넷 소문과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윤철호 원장이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사성 물질 유입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3·4 디도스 공격은 北소행"

2년전과 IP·수법 일치



지난달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과 금융기관, 주요 인터넷기업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뤄진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 : DDos) 공격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6일 "악성코드 유포 사이트와 국내 감염 좀비 PC, 외국 공격명령 서버를 정밀 분석한 결과 공격 체계와 방식, 악성코드 설계방식과 통신방식이 2009년 7월 7일 발생한 디도스 공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밝혔다.

'7·7 디도스 공격'은 2009년 7월 7~9일 61개국에서 435대의 서버를 이용해 한국과 미국 주요기관 35개 사이트를 해킹한 사건으로 공격 근원지가 중국에 있는 북한 체신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특히 이번 디도스 공격과 7.7 디도스 공격에서 활용된 외국 공격 명령 서버의 일부가 같다는 점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지난달 3~5일 발생한 디도스 공격은 파일공유 사이트의 업데이트 파일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악성코드를 유포해 10만여대의 PC를 감염시켰고 70개국 746개 공격명령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좀비 PC를 제어하며 공격 명령이 내려졌다. 경찰은 외국 공격명령서버를 추가 확보하고자 국제공조를 요청하는 등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북 쌀 지원 재개해야"

野·시민단체 정부에 촉구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6일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유엔이 대북 식량지원을 권고하고 국제사회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외면해서야 되겠느냐"며 "대규모 식량 지원에 나서고, 이를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터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미국은 분배투명성 보장만 되면 북한을 방문해 협의하고 곧 식량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쌀 지원을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훌륭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산가족 1년새 4000명 사망

상봉 신청 12만8500명중 4만6700명 숨져

고령 등으로 최근 1년간 숨진 이산가족이 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2만8509명 가운데 2월말 기준으로 4만6715명이 이미 숨졌다.

이는 1년전인 지난해 2월말 기준 사망자가 4만2631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4084명이 늘어난 것이다.

사망자 가운데 83%가 80대 이상(80대 44.2%, 90대 이상 38.8%)인 것으로 집계돼 대부분 고령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2월말에는 등록인원 12만5375명 가운데 사망자가 2만8245명으로 최근 5년새 1만847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 이산가족 중에서도 70대 이상이 전체 78.7%(70대 34.5%, 80대 37.3%, 90대 이상 6.9%)를 차지하는 등 생존자들의 고령화도 뚜렷하다.

이산가족의 사망률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북측 가족과의 만남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통일부는 향후 이산가족 정례화에 대비, 기초자료를 정비하기 위해 현재 이산가족 실태에 관한 첫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외규장각 도서 1차분 50여권 14일 한국 도착

프랑스가 반환하기로 한 외규장각 도서 중 1차분이 오는 14일 한국으로 돌아온다.

이들 도서를 소장하게 될 국립중앙박물관 김영나 관장은 "반환대상 297권 중 1차분이 14일 오후 2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아시아나 여객기 편으로 들어와 곧바로 박물관으로 운송할 예정"이라고 6일 말했다.

김 관장은 "1차 반환분은 50권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아직 최종 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반환 완료 시점에 대국민 홍보 행사를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군대가 1866년 병인양요 때 강화도 외규장각에서 약탈해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 중인 이들 고서는 1991년 서울대가 공식 반환을 요청한 이래 지난해 G20 서울정상회의 기간에 이명박 대통령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5년 단위로 갱신하는 임대 방식 반환을 합의함에 따라 마침내 돌아오게 됐다. /연합뉴스

정부 '日 방사능누출 대책회의' 구성키로

'방사능 비' 여부 신속 공개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방사능 누출사태에 대응할 태스크포스(TF) 형식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7일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방사능 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 비가 내리면 방사성 물질 포함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해 공개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에서 잇따라 열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원전 및 방사능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전했다.

대책회의는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외교통상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 내 유관부처 당국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매주 두 차례씩 개최된다.

대책회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사태에 따른 대응은 물론 식료품 안전대책, 국내 원전의 안전성 확보, 중장기 원전정책 등을 총괄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육동한 국무차장 주재로 외교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진데 이어 오전 10시30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한편, 일본 측은 이날 오전 주일 한국대사관 참사관에게 "앞으로 주변 해역에 대해 더욱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고 기준치를 넘길 위험성이 있으면 방출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 자리에서 방출의 불가피성과 함께 오염 정도가 낮다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앞으로 보다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백두산 회의 12일 개성서"

정부, 北단장에 전통문 발송

정부는 6일 백두산 화산 문제 논의를 위한 제2차 남북 전문가회의를 오는 12일 북측 지역인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전문가회의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북측 단장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 전통문을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오늘 北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국방위 진출 주목

우리의 정기국회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가 7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다.

본회의에 앞서 5일부터 평양에 도착하기 시작한 북한 전역의 대의원은 6일 오후까지 등록을 마치게 된다.

매년 3~4월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전년도 예산결산과 당해 연도 예산승인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그 밖에 각종 법령 승인과 채택, 국가기구 개편 및 인사 등의 안건도 다뤄진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국방위원회와 내각 개편 과정에서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어떤 직책이 부여되느냐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에 선임될 것으로 관측한다. /연합뉴스